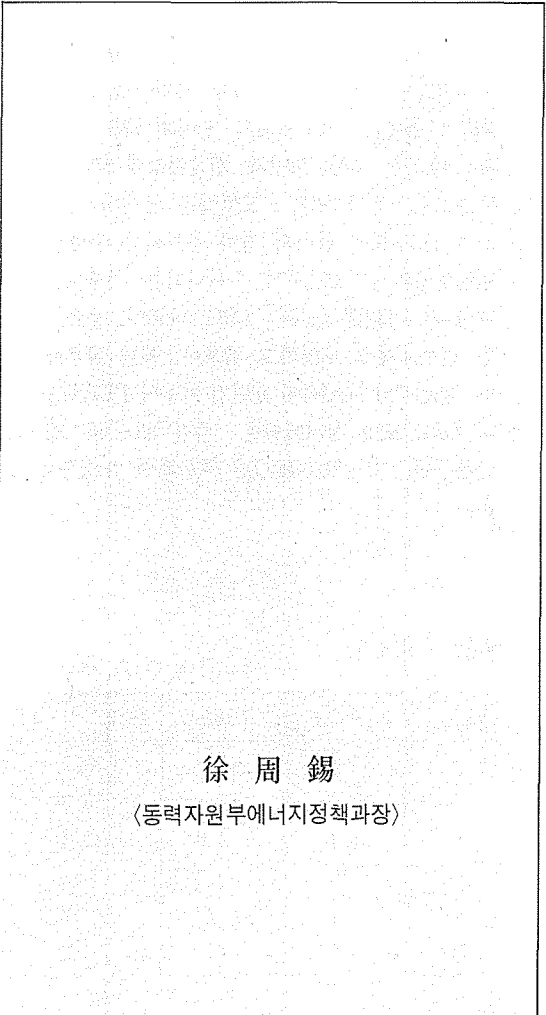


1. 머리말

금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는 에너지·자원분야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분야 못지않게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의 경험

'90년도 에너지정책방향



徐 周 錫

(동력자원부에너지정책과장)

을 거울삼아 명실공히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80년대의 국내의 동향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90년대의 장기 비전을 설정해 본후 그 바탕 위에서 금년의 에너지·자원정책에서는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90년대 중반에 제3의 석유과동의 개연성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그간 다소 소홀히 되고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대응전략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80년대 에너지정책의 회고와 평가

'80년대의 국내의 에너지여건은 '60년대 및 '70년대에 비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점에서 특이한 연대로서 어느 면에서는 '90년대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60년대의 값싸고 풍부하며 안정된 에너지 및 자원 수급여건은 세계경제의 공동번영국면을 가능케 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개발년대의 고속성장기반을 다지게 됐다.

반면에 '70년대는 두차례의 급심한 석유위기로 에너지가격의 급상승은 물론 소요물량 확보자체의 극심한 애로로 세계경제는 자원빈국과 자원보유국간 극심한 확보경쟁으로 지리적 또는 경제권역 중심의 블록화를 진행시키게 한 연대였다. 뿐만 아니라 두차례의 석유위기는 다 같이 가격상승과 물량부족의 위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으나, 세계경제에의 어느 면에서 판이하다

고 볼 수 있다. 1차위기는 소위 오일달러의 재환류(recycling)로 OPEC 회원국의 과도한 원유판매수익은 선진국의 금융시장으로 흘러 이들 국가에 막대한 금융 운용수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당 부분이 개도국의 개발투자에 활용되어 세계경제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에 2차위기는 OPEC 회원국의 수입감소, 선진국의 오일달러 유입감소와 개도국의 개발투자비 조달애로의 연쇄작용으로 세계경제를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통상마찰을 가열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서자 '83년부터 세계석유시장은 가격하락과 물량의 공급과잉으로 국제공식유가는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하락하고 산유국의 시장확보 경쟁탈전이 가열화되어 종래의 판매자 주도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주도시장(Buyers' market)로 전환되었다. 이는 '86년에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공식 원유가는 배럴당 18달러로 대폭 하락하고, 현물시장에서는 한때 7~8달러 수준에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국제금리인하와 미화가치의 하락과 함께 3저효과를 가져와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조기정착과 외채의 대폭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나, 장기 에너지안정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83년부터 이미 제3의 석유위기-가격폭락과 공급과잉 파동-가 진전되고 있어 다른 각도에서의 대응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이완과 원자력 및 석탄이용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확대를 통한 에너지원 다원화 노력의 둔화로 '90년대의 에너지안정기반을 취약하게 한 주요요인을 배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전에도 그간 우리는 脫石油을 위한 에너지源의 다원화 및 도입선 다변화 자주공급역량의 제고노력으로 石油의존도는 '78년 63% 수준에서 '89년에는 49%로 크게 감축되고 원유도입선도 中東의 3개국에서 20여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메이저의존의 석유산업을 자주경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유도 정부비축 60일분을 포함 80일분 이상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에너지 자주관리능력을 크게 배양하게 되었다.

3. '90년도 주요 에너지 정책방향

금년도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금년이 '80년대를 마무리짓고 '90년대의 첫해로써 21세기를 향한 대전환기라는 역사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서 검토되었다.

특히 '90년대는 국제 정치·경제적으로는 탈이념화하고 지역결합에 따른 <블록> 경제권의 형성에 따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환경은 '80년대의 저에너지가격과 공급과잉현상은 생산과 수요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환경육구의 고조로 고급에너지 수요증대에 권역간 갈등이 가세하여 高에너지가격과 수급긴장이 예상되므로 이를 여하히 슬기롭게 극복하여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차질없이 지원하느냐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 하겠다. 따라서 과거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여건변화를 예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슬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금년에는 그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서의 중요성이 중차대하다 하겠다.

(1) '90년대의 전망과 대응방향

'90년대의 국제에너지환경은 '80년대와는 상이한 새로운 도전이 예상된다. 즉 종래의 低에너지가격과 공급과잉에 따른 「구미자주도」 시대는 서서히 끝나고 '70년대와 같은 「판매자주도」 시대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전망이 예상된다. 세계에너지시장을 주도하는 石油의 경우 '80년대의 低油價 지속으로 OPEC을 중심으로 한 주요산유국의 생산투자감각과 非OPEC 산유국의 원유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과도한 생산으로 原油의 공급능력확충의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 개도국의 공업화와 최근 동구권의 개방화에 따른 수요증대로 구조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첫째,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 때에는 주요소비국은 석유의존도의 감축을 위해 脫石油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83년 이래의 「저유가쇼크」로 이러한 노력은 급격히 냉각된 점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을 거의 상회하는 에너지소비증가, 특히 석유소비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석유의존도, 나아가 OPEC 石油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최근의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방화 및 국제화추세에 따라 권역별 <블록화>가 진전되어 에너지수급면에서도 공급확보면에서 그 外延이 확대된 반면 생산권과 소비권과의 권역중심의 확보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2년까지 EC의 통합이 완료되면 대소비 선진국권인 EC와 21세기 경제중심권으로 부상될 아시아·태평양권간에 OPEC 등 산유국권과의 확보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원보유국과 소비국으로 혼성된 동구권의 역할은 새로운 「딜레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원보유국인 중국과 소련이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종래와는 달리 적으나마 주변국가에 에너지수출을 할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자체 개발투자가 없는 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확보 전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지구적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북방 자원보유국가와 에너지의 공동개발활용을 위한 투자확대 노력이 에너지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상당기간 우리의 경우 EC통합의 반작용으로 아시아·태평양권의 결속이 강화되어질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을 조속히 재정립해야겠다.

셋째,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중되고 있는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로 이제는 에너지수급안정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와 환경의 3대요소간에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냐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어느 한 면만의 지나친 강조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적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은 날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합리적인 수렴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적 여건변화 추세에 우리의 여건변화를 조명해 볼 때 우리의 '90년대 에너지 수급상황은 많은 도전이 예상되고 자원빈국으로서의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 슬기로운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국민소득의 증가와 최근 低에너지가

격시대의 관성으로 석유, 가스 및 전력 등 고급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는데다 환경권의 증폭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가격의 상승요인이 가중되는데다 원전 및 발전소입지 반대와 연탄공장이전 반대 등으로 소요에너지 공급시설의 적기 완공이 크게 우려되어 수급불안요인은 더욱 심각하여 이는 나아가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적정 경제성장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90년대의 에너지정책은 불확실한 국내의 에너지정세에 대비하면서 「경제성장」과 「깨끗한 환경」 및 소요에너지의 「안정수급」간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부문의 경우 정치 및 경제 민주화추세에 부응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에너지를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2) '90년도 주요 에너지 정책방향

이상과 같은 '90년대 국내의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라 '90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개 과제에 역점을 두어 에너지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 첫째,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확보체제를 강화하고
- 둘째, 에너지산업 체질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 셋째, 에너지가격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안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 넷째, 깨끗한 에너지의 공급확대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 다섯째, 산업평화의 정착과 민주화 및 지방화에 부응하여 에너지부문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 여섯째, 국제사회적 책임과 권한의 조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과 자원의교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4. '90년도 주요 에너지 정책방향

이상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자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확보체제의 강화

에너지는 식량 및 국방과 더불어 국가안보의 3대 지주로서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에너지자원의 안정공급체제를 완비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이다.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해외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하며 자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성있는 국내에너지자원의 확보에 노력하여 '90년대 중반까지 동해안의 가스생산을 달성토록 하며 국내 무연탄산업도 합리화와 아울러 적정규모의 생산을 유지하여 자원안보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적지 않으나, 환경오염에 관한 깨끗한 에너지원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투자확대와 아울러 국민적 신뢰기반을 확충하여 조기에 국산에너지로서의 정착을 위해 표준화와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소요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石油, 유연탄, 철광석 및 우라늄 등 전력자원을 '90년대에 국내소요 20~30% 이상을 자주개발, 수입토록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90년대 중반의 제3의 석유위기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60일본 소요의 정부석유비축능력을 수요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증강하기 위하여 기존 비축시설의 보강과 신규 비축시설의 건설 및 비축유확보를 추진하고 주요 산유국 등 자원보유국과의 항구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관계에 바탕을 둔 자원외교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가일로에 있는 에너지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전력, 石油 및 LNG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척기완공을 위하여 소요입지와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토개발계획과의 연계반영은 물론 금년부터 실시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기존의 석유사업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약은 추가에너지 공급시설수요의 감축과 직접적인 에너지생산업은 물론 근원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서 나아가서는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감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다른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에너지바로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에너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합리적인 이행을 촉진하여 대외경쟁력의 향상과 에너지안보의 강화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겠다. 따라서 산업부문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정보·소프트웨어산업 등 에너지 저소비형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질의 전력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알미늄정련산업

등 에너지다소비산업은 가급적 자원보유국가로의 이전이나 신규해외입지의 확보를 권장하는 한편 열병합발전 시설 등을 구비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수송부문은 에너지절감과 교통난해소에 역점을 두어 전국적으로 서산-천안 및 경인구간 등 4대 송유관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대도시 교통난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용 유류가격은 가능한 인하를 억제해 나갈 것이다.

(2) 에너지산업 체질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

저렴하고 양질의 에너지공급기반의 확충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향상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의 대외경쟁력제고는 물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석탄산업 부문은 지난 해에 착수한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과 경제성있는 탄광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기계화확진을 통한 생산성향상 등에 주력하여 중장기적인 석탄생산안정대를 설정하여 적정생산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전력산업은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표준화와 원전 연료의 핵심기술기반을 다져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도 기간수출산업화 되도록 육성·지원해나갈 것이다. 또한 개방화 및 국제화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석유산업을 국제규모로 성장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 엔지니어링분야의 진출을 통하여 종합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에너지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와 도시폐기물소각 프랜트와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대하여 2천년까지 국내 소요에너지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에너지 가격의 안정관리를 통한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도모

에너지가격의 안정은 가계안정과 산업경쟁력제고는 물론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주요 요인이므로 최근의 경제난국의 슬기로운 극복차원에서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내석유류가격은 '86년 이래 6차에 걸쳐 공장도기준으로 45.9%나 인하되어 왔으나, 최근 두자리 숫자의 지속적인 소비증가세를 감안, 더 이상의 유가인하를 자제하여 현 가격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국

제원유가가 배럴당 18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선 석유기금과 석유판매세의 조정으로 인상요인을 흡수, 완충토록 하며, 미흡할 경우 현재 보유중인 1조 6천여억 원의 油價완충용예비자금을 적기 활용하여 油價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전력요금의 경우도 '86년 이래 6차에 걸쳐 22.8%나 인하여 현재로서는 주요 경쟁국인 日本 및 臺灣 등에 비해 저렴한 수준인데다 '90년대 중반 이후 막대한 투자재원소요가 발생될 전망이다. 최근 단기 수익발생분을 활용하여 전력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거론도 있으나 가능한 한 더 이상의 인하는 자제하되 요금구조의 국제화와 원가보상주의 등을 반영하는 선에서의 구조개선을 신중히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무연탄가격은 타에너지가격의 지속적인 인하에 비해 근로자임금 상승과 석탄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 및 석유기금지원을 통한 인상요인의 흡수노력에도 불구하고 '86년 이래 3차에 걸친 최소한의 인상에도 분탄은 28.4%, 연탄은 21.4%가 인상되었으나, '89년에는 모두 가격을 동결하였다. 향후 석탄 및 연탄가격은 임금상승 등 인상요인이 가중될 것이나 가능한 한 임금은 한자리 숫자의 낮은 수준으로 억제토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정부, 업계, 근로자 및 가계가 적정분담토록 하는 원칙하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즉 정부는 산재보험 등 사회복지성격의 부담을 분담하되 업계는 경영합리화로 흡수하고 근로자는 과도한 임금상승을 자제하며 가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분담토록 하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별도의 연료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4) 환경개선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의 공급 확대

산업화의 진전과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로 石油 및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유황산화물 및 질산화합물 등의 배출이 대기오염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에너지부문의 환경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환경요인을 감안한 「중·장기 에너지환경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특히 깨끗한 에너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

원 발전소는 LNG연료로 대체하고 대형건물의 LNG사용의무화를 확대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경우 저유황경질유의 생산시설을 의무화하여 2천년까지 현재의 4%의 탈황시설비율을 30%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가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확보로 국민의 신뢰기반을 확충하여 무공해에너지로서의 인식을 다져나갈 것이다. 또한 가스화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 에너지중 LNG의 비율을 현 4% 수준에서 2천년대 초까지 10% 내외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보급률을 12% 수준에서 55%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LNG인수기지의 증설확대와 아울러 신규LNG인수기지를 '96년까지 완공할 목표하에 금년중에 추가 LNG도입선을 확정하며 전국적인 LNG배관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총 1,318km의 배관망건설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절감효과가 30% 이상이며 공해저감효과도 50%가 넘는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사업을 적극 권장, 추진하여 분당·평촌 및 일산 등 신도시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가동토록 하고 현재 蔚山, 麗川, 大邱공단 등에 가동중이며 반월, 이리공단 등 7개 공단에 건설중인 열병합발전사업도 앞으로 전국 65개 공단에 확대도입토록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중에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심지 연탄공장의 공해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이전대상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연탄소비감소에 따른 기존 연탄공장의 생산설비의 감축과 잔여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한편 시외곽이나 생산지로의 이전방안을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산업평화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석탄산업은 종래 여타 분야에 비해 노사분규 등이 극심했으나, '89년에 석탄산업합리화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실시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협조하에 산업평화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석탄분야의 산업평화의 정착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업계, 근로자 및 지역주민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지속적인 산업평화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 및 가족의 후생복지사업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정주의식을 정착시키고 자녀학자금 및 진폐기금 등 사회복지성격비용의 일부를 계속 지원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차원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투자를 적정 배분토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농어촌전환촉진법」에 의거 전국토의 전화사업을 '95년까지 잔여 벽지 및 낙도지역에도 확대, 완료하고 지리적여건상 어려운 지역을 태양광, 풍력, 및 자가발전시설 등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발전소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주민소득증대와 의료, 교육 및 문화시설 등 공공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탄광지역의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경제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탄지에 광공단지 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 조성하여 대체산업화를 촉진하며 그 성과를 보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시에는 건설입지난을 감안하여 대규모공급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대소비처 인근에 소규모의 열원시설 등을 병행하여 건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소요에너지의 적기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6)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자원외교활동의 강화

현재 8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소요에너지의 안정확보공급을 위하여 북방권을 포함한 자원보유국과

선진 주요소비국과의 자원외교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 직후에는 해외자원 개발이나 산유국과의 외교강화노력 등이 크게 활성화 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 저유가시대의 지속으로 경제성악화 등으로 이러한 노력이 크게 둔화되어 장기 안정수급에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와 해외진출이 시작되어, 石油, 유연탄, 무연탄, 우라늄 및 유황 등 5개 광종의 개발단계에 11개 사업, 탐사단계에 21개 사업 등 10여개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개발수입률은 石油의 경우 5% 이하이며 유연탄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간의 침체를 벗어나 다행히도 활성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자금도 현 120억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방정책과 연계하여 기존의 에너지도입선의 일부를 북방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시베리아의 유연탄 합작개발사업의 진출 등 북방권에 대한 자원협력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대소비 선진 국가와도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대소비국가로서 경제력의 증대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에 따른 책임분담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자원보유국과의 쌍무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고, 다자간협력을 위하여 에너지자원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향후 심해저 및 남극자원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할 것이다. ♣

□ 도서안내 □

석유의 이모저모

- 大韓石油協會 -